

인간존엄성과 생명문화

김용해 S.J.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장

1. 인간은 왜 존엄하다고 말하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 질 수 없다.”(독일 기본법 1조 1항). 대한민국 헌법 10조와 독일 기본법 1조 1항의 예에서 보듯 현대 법치국가의 헌법의 기본조항에서 선언된 인간존엄성은 인권의 근거로 이해되며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인간존엄성 개념은 현대의 인간존엄성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인간은 자기목적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엄하다. 자기목적임을 스스로 주장하거나, 자기 자신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는 측면(대자적 자기목적)에서뿐 아니라 스스로 또는 연고자가 주장할 수 없거나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자기목적성(즉자적 자기목적)을 갖는다는 말이다.¹⁾ 칸트는 “네가 인간성을 너의 인격에서든 다른 사람의 인격에서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여기고, 어떤 경우에도 단지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방식으로 행하라.”(GMS, B 52이하)는 정언명법을

1) R. Spaemann, *Das Natuerliche und das Vernuenftige*, (Muenchen, Zuerich: Piper, 1987), 86 이하.

실천이성 안에서 수립했는데, 이것이 인간의 자기목적성을 지시하는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의 수단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 경우라도 동시에 그가 목적자체임을 인정하고 대하라는 뜻이다. 둘째로 인간은 존엄성에 관한한 인종, 피부색깔, 성,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그 밖의 신념, 국가적 사회적 출신, 재산 혹은 그 밖의 조건들의 차이성에 따라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즉 모든 인간은 존엄에 있어서 평등하다.²⁾ 사회 안에서의 역할과 인격의 완성도에 따라 현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존엄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래적 의미의 인간존엄성은 인간에 따라서 그 어떤 차이도 없다. 셋째로 인간존엄성의 존중은 윤리적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근거이지만 충분한 규정근거이지는 않다.³⁾ 인간은 윤리적 행위에 있어서 자유로운 자기규정과 책임성 때문에 존엄성을 지닌다. 이런 의미로 인간존엄성은 행위 이전에 이미 소유한 것으로, 동시에 행위를 통해 완성시켜 가는 의무로 윤리적 선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존엄성을 선과 악의 기준자로, 전통적 의미로 보자면 마치 인간본성(*natura humana*) 혹은 올바른 이성(*recta ratio*)처럼 간주할 수 있다.⁴⁾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인간존엄성은 단지 정치적, 법적 선언인가, 아니면 인간학적 근거를 갖는 것인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본성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인간존엄성의 근거를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등 신 관념을 가진 종교의 전통에서는 ‘신의 모상(*imago Dei*)’이나 ‘인격(*persona*)’으로, 불교 등 자연종교에서는 ‘불성(*Buddha-dhatu*)’, 신과 인간을 일체적으로 파악하는 동학 천도교에서는 ‘인내천(人乃天)’ 등의 표현으로 그 근거를 표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표현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인간존엄성은, 인간이 존재자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절대 실재(또는 전체 실재)와의 합일을 통해 - 절대 실재와 관계를 맺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절대 실재에 맞닿은 태도와 결단으로 -, 절대 실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두개의 영역, 한편으로 과거로부터의 인류의 유산과, 다른 한편 미래로 향한 창조적 개방성을 고려하면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삶의

2)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유엔총회 제정) 제2조, <https://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접속일: 2020.11.20); B. Schueler, “Die Personwuerde des Menschen als Beweisgrund in der normativen Ethik”, *Theologie und Philosophie*, 53(1978), 539 이하.

3) Schueler, 548 이하.

4) Ibid., 549 이하.

목적으로 삼아 자신을 실현시키려 노력하는, “종교적 실존”에 그 근거를 갖는다.⁵⁾ 인간존엄성은 절대적 실재, 또는 전실재(全實在)와의 관계에서 근원되기 때문에 자기 밖의 어떤 존재자, 어떤 다른 인간에게로부터 박탈당할 수 없고, 다만 침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도 타인에 의해 자기 존엄성을 탈취당할 수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존엄에 반하게 행동할 수 있고, 따라서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존엄을 잃을 수도 있다. 예컨대 자기 고유한 존재의 존엄성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거나 양심의 내적 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에 반해서 행동을 하면 자신이 분열되고 자신의 존엄성은 억압된다. 그리하여 절대적 실재로부터 소외된다. 이 사실은 인간의 ‘실존적 의무’를 부각시킨다. 절대적 실재에 대한 의무감 내지 경외감 없이는, 즉 존재 일반에 대한 예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과 다른 존재와 관계에서의 진정성과 정당성이 없는 인간은 자기 고유한 존엄성을 의식(자각)하고, 유지하며, 성취하기 어렵다. 동양의 유학과 실학사상은 이러한 절대적 실재에 대한 경외감을 ‘천명(天命)’, 하늘의 명령이라 불렀다. 정약용은 천명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태어나서 처음에 부여되는 명령’으로 ‘천성(天性)’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시시각각으로 계속하여 부여하는 명령’으로 ‘경고(儆告)’라 해석하였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절대적 실재와 관계를 맺고 절대적 실재가 스스로를 계시하든지, 인간에게 명령을 하든지, 인간이 그 뜻을 알아듣고 그의 뜻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을 나는 인간의 ‘실존적 의무’라 부른다. 이 실존적 의무는 절대자와의 소통과 합일을 통한 자신에 대한 자각, 즉 존엄성과 무한성을 체험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지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자각 속에서 자신의 양심과 생각, 자율적 결단과 행위에 대한 천부적 권리, 즉 인권을 기본권으로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존적 의무’는 ‘인권’ 인정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 의무의 내용에는 나의 인권을 주장하는 만큼 타인의 그것도 내가 인정해야 할 ‘규범적 의무’를 내포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인권’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즉 ‘실존적 의무’는 절대적 실재와 의식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에 대한 감사로움으로 발생하고 자각되고 근거 지어진다면, ‘규범적 의무’는 자기 인권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고려해야 하

5) 종교(religion)의 어원이 re-ligare(다시 결합하다)는 설을 채택하여 인간이 절대적 실존과의 간극을 인식하고 다시 재결합하려 노력하는 실존이라는 의미로 나는 이를 ‘종교적 실존’이라 부른다. 이는 종교를 믿는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실존적으로 절대실재 또는 전실재와의 관계 회복의 과정(종교적)에서 자신을 실현한다는 것을 부각시킨다. ‘종교적 실존’에 관해서는 김용해, 『인간존엄성의 철학』, (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302-306 참조.

는 정의의 원리에서 근거 지어진다.⁶⁾ 인간이 실존적 의무와 이로부터 파생하는 완성으로부터 오는, 전취된 영광을 의식하면 - 동시에 양심의 깊은 곳에서 절대자로부터 부름을 받는데 - 그는 자신의 존엄성에 근원을 둔 실존적 과제에 투신하고자 의지가 발동하기 시작한다. 이 실존적 과제는 인간 존엄성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실존적 의무 과제를 수행했다고 해서 존엄성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실존적 과제의 준비성으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의 지배적 기관, 특히 국가와 국제기구들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에서는 자기의 이기적 자아를 넘어 개방하고, 진실재에 직면하여 진실하며, 가치 추구에서 발생하는 긴장 속에서도 실존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각 개인들에게 요청되는 구체적 의무들이 문제가 된다. 이 요구는 특별히 윤리와 종교가 다루는, 인류성을 위한 당위와 의무를 만든다. 실존적 의무가 국가에 요구하는 형태는 국가가 어떻게 시민의 타고난 권리, 즉 소위 기본권과 인권 등을 보장해야 할지, 국가가 이 권리를 위해 자신의 행동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해야 할지의 물음과 관련된다. 국가에 대한 요구들은 국제법과 여러 형태로 헌법에 편입된 기본법에서 수용되어 있고, 사회적 관계 안의 개인상호간의 인권적 요구들은 각 국가의 기본법과 형법에서 인간의 의무 형태로 다루어진다.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인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다. 국제인권기구들에 의해 보장되고 발효된 권리들 중에는 생명의 권리,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사상과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 결정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정치, 문화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실존적 의무의 성실한 실행 없이 그저 인권에 대한 요구만을 통해서만 그의 존엄과 실존적 완성을 이룰 수 없다. 요컨대 인간의 존엄성은 실존적 의무의 자각과 실행에도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으로 인간에게 인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인권은 따라서 인간 존엄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

2. 인간존엄성과 대한민국의 현실

1) 국민의 존엄성

6) ‘실존적 의무’에 관해서는 *ibid.*, 318-321 참조.

앞에서 언급한대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 규정한다. 헌법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에게 존엄성을 부여하고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국적의 개인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외국인에게도 이 조항이 유효한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어 질 수 없다.”(독일 기본법 1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독일 국가로부터 존엄성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가 국민이라는 범주 안에 간혀 있어 외국인은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외국인노동자, 이주민들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인정하고 대우하는 문화가 아직 한국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2) 양심의 자유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인권의 핵심가치인 양심의 자유보다 더 우선하는 경향을 사회문화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병역의무의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법제화하도록 했으나 아직 제도화가 완성되지 못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정신을 현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금지의 대상을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으로 명시하려고 하는 데 개신교 일부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성 소수자들의 양심과 자기결정권은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지 알 수 없다. 이 차별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이지’, 종교적 영역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밖의 영역에까지 자신들의 근본주의적 신념을 강요하고 있다.

3) 상호존중 없는 권리주장

나는 앞에서 인간존엄성의 양면, 즉 실존적 의무와 인권이라는 측면을 언급했다. 그런

데 우리사회는 급속한 변화와 함께 윤리적 기초였던 전통도덕이 무너지고 인권과 복지 등 민주화로 나아가면서 실존적 의무 측면 보다 인권 측면이 훨씬 더 부각되고 있다. 동료 인간에 대한 예의, 태아의 생명존중, 생명과 환경에 대한 경외감,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진정성과 정의감 등의 실존적 의무 보다는 자기 자신만의 인권과 권리주장을 앞세우고 있다. 자기 양심과 유리된 거짓주장과 의도적인 가짜 뉴스는 자기존재를 분열시키고, 이것이 부메랑되어 결국 자신에게 보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혐오와 배제의 전략을 일삼는 정치 선동가들이 있다. 우리사회가 승자독식과 전형적인 갑질 문화의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인간성이 상실되고 시민의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4) 차이와 차별의 혼돈

남성과 여성을 생물학적 성차이로 결정할 것인가 각자의 성정체감이나 감정에 기준을 둘 것인지도 문제다. 사람에 따라서는 자신의 성감수성에 따라 신체적 성전환을 피하여 안정감을 얻은 트랜스젠더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 성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지만 사회정서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소수자, 즉 LGBTAIQ라 불리는 수많은 성적 경향성의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의 수혜자가 되지 못한 점에서 이들에게 헌법적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은 차이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하다. 이들에게도 인간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자아실현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주민, 이주노동자, 아동과 여성을 차별하는 왜곡된 문화와 전통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혼인율, 출산율이 지극히 낮고 이혼율이 높은 이유의 배경에 남녀 차별의 문화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속적 1위인 불명예를 안고 있는 사회적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인간존엄과 생명을 증진하려는 문화적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성찰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3. 그리스도교의 생명론과 형법의 낙태죄

생명은 인간 존재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기에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의 권리이다. 생

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모든 생명체의 기초적 조건이다. 생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생명이 있고 인권이 있다. 생명의 권리는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보다 선행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 들어졌다고 한다(창세 1, 26). 그리고 성서의 곳곳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시고, 인간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를 단죄한다(창세 9,5; 출애굽 4,11-15 ; 요한 11,15. 21).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에 대한 생명도 경시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생명처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출생과 사망까지로 좁혀 생각할 때 교회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허용하신 과제이며, 참 삶을 발견하고 자기를 완성시킬 가능성이자 기회라고 가르친다. 또한 인간 생명의 원초적인 주도권은 하느님께 귀속되어 있음을 가르친다. 인간생명과 낙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중 다음의 몇 가지는 중요하다. 첫째,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⁷⁾ 둘째,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⁸⁾ 셋째, “시민 사회와 정치권력은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의 권리는 (...) 인간 본성에 속하는 것이며, 사람의 기원이 되는 창조 행위으로써 인간 안에 타고난 것이다.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 임신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모든 인간이 갖는 생명권과 육체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지적해야만 한다.”⁹⁾

현대세계에서는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수정의 경우에 신체의 바깥에서 생명을 목적하고, 임신중절의 다양한 방식이 임신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가 이슈화되었다. 우리가 생명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의 시작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신체의 기능을 인공적으로 유지

7) 『가톨릭교회 교리서』, 2258항, <https://cbck.or.kr/Documents/Catechism>(접속일: 2020.11.20); 신앙교리성, 훈령 「생명의 선물」, 서문, 5항 참조,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214841#p=129>(접속일: 2020.11.20).

8) 『가톨릭교회 교리서』, 2270항; 「생명의 선물」, 제1부 인간 배아에 대한 존중, 1항 참조.

9) 『가톨릭교회 교리서』, 2273항; 「생명의 선물」, 제3부 도덕법과 국법 참조.

하는 장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언제 죽은 것인가라는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는 뇌사와 심장 및 혈액순환의 정지가 자연적으로 서로 아주 밀접했기 때문에, 대체로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이 아주 분명하게 답변될 수 있었다. 생명을 정의 내리는 데 있어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경계 짓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진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법률적으로 정의되고, 이를 통해 생명보호를 보장함과 동시에 의료와 과학 활동을 위한 여지가 설정된다. 법률적인 정의는 객관적이어야 하겠지만 다른 학문분야, 특히 자연과학이 내리는 정의와 동떨어질 수 없다. 생명의 시작과 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 법률은 삶과 죽음에 대한 의학 및 생물학의 지식을 이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사건은 생물학적인 현상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없는 지점에서, 사회과학과 정신과학은 물론 인간학과 종교들의 해석도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2019년 4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를 둘러싼, 1953년 법 제정 이후 66년의 오랜 논쟁에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형법 269조 1항 자기낙태죄, 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산부인과 의사의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라고 주문하면서 그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낙태죄 찬반의 문제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느냐에 달려있다. 2012년의 현재는 재판관 8명(공석 1명)이 참여한 낙태죄에 대한 선고에서 4대4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을 더 우선적으로 인정한 판정이었다. 그러나 7년 후 2019년 그동안 여성 인권을 향한 사회의식이 높아지면서 현재도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계 등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치 않는 임신 유지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며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낙태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죄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들어 낙태죄가 유지된다고 해서 태아나 여성의 생명이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종교계 등 낙태죄 존치를 요구하는 쪽은 태아의 독자적인 생명권을 주장했다. 또 유전학적 문제, 성폭행, 임신부의 건강 등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 모자보건법이 이미 있음을 들어 “낙태 처벌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

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동 헌법재판소는 2008년에 태아의 생명권도 인간존엄성에 관한 헌법10조를 들어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 2008.7.31.)고 판결한 적도 있다. 따라서 형법의 낙태죄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은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주문이라기보다 임신의 단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법률개정이 필요하여 이를 이행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불합치판정을 받은 현행 낙태죄가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죄의 유효성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무방비 상태로 둘 수 없는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를 의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존엄성의 내용 중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은 법률적인 차원에서 규범화되어야겠지만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한 정자와 난자의 수정단계에서 시작하여 일련의 발생과정을 거쳐 탄생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준으로 -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이 인위적인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들어 임신주기에 따른 생명권 보호 자체를 부정한다 - 낙태에 대한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시점을 규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도 하다. 다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이 지시하는 것처럼 강제규범인 법은 낙태죄의 적용범위를 실효성 있게 규정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또한 종교와 시민사회는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유롭지 못한 선택을 방조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임신여성은 물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서 나오는 가치와 신념은 법 개정과 상관없이 구속받지 않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공론장에서 활발히 제시하고 더 나아가 법의 개정 이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런 공론장에서는 의학과 생물학 등 자연과학 전문가가 참여하여 생명현상을 가치중립적으로 설명하고, 여성학과 사회복지학 전문가는 낙태에 관한 우리사회의 현상을 서술하며, 윤리학과 신학은 생명의 가치와 자기 결정권의 경중을 식별하고, 법학은 이를 종합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규범을 제안하여 모두가 강제 받지 않고 합의할 수 있는 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